

중국의 대 아시아 정책

김 성 우*

요 약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미·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The Policy of China toward Asia

Kim, Sung Woo*

ABSTRACT

With the rise of China, the power and hegemony is moving to China in East Asia. The foreign policy of the China governm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Korea,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orld. China is advocating a new international policy, a new security system, silk road policy and a new paradigm. China is a newly emerging powerful nation in Asia, and it is clear that China has the economic power to reestablish the Asian order and take over the hegemony. In addition, we want to run the world supremacy with the United States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sector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being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e are in the position to do our best to cooperate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further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policy of Southeast Asia and China macroscopically.

Key words : power and hegemony, international policy, political, economic, military, diplomatic

접수일(2017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2017년 10월 29일)

* 동명대학교/군사학과

1. 문제의 제기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창설 1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 국민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고 국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문명과 조화롭고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개의 백년 목표와 중국의 꿈을 제시한 것이다.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100년 목표가 제시되었다. 중국은 빠른 시일내에 미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2049년까지 서방세계와 일본을 합친 경제력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국가목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은 친밀, 혜택, 성실, 포용인데 이것은 시진핑의 고전과 현대를 조화롭게 한다는 개념인데 주변국가와 잘 지내며 동반자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웃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야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이다. 시진핑은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이라는 개념을 지도이념으로 내놓았다. 주변과 친화정책을 추구하여 마음을 얻고 인심을 돈독하게 하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 중국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정책이며 이를 통하여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경제에서는 윈윈(win-win)정책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일대의 실크로드 경제 블록, 동남아시아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통하여 새로운 21세기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설하여 주변국가와 금융일체화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2014년 5월 20-21일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신안보관을 제시했는데, 아시아의 협력, 지속 가능한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 신안보관은 아시아 안보 및 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여 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역내 안보협

력 강조,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역내 복합적인 안보협력 기제를 만들어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강대국 관계에서는 군사력을 비롯한 물질적 힘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약소국의 강대국 관계에서는 군사력 등이 강대국에 못 미치기 때문에 외교를 통하여 부족한 힘을 보완하여 유약한 자국을 방위해야 하므로 외교의 역할이 실제로 크게 문제된다. 즉 약소국은 국제정치에서 비록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외교정책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면적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지고 김정은에 대한 제재도 제외됐다. 미국이 마련하고 한국이 적극 추진한 초안의 결정적 제재 내용이 빠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러의 반대 의중은 명확하다. 김정은 체제를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킬 생각이 없고, 핵과 미사일을 현 상태에서 적절히 묶어둬 한·미·일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러가 김정은 정권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원유 공급을 중단할 리 없다. 게다가 중·러가 원유 공급이나 섬유 수입, 북한 노동자 고용 등을 해도 솔직히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감시하거나 제재할 방도가 별로 없다.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2].

여기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냉전시 중국의 동남아 정책

중국에게 동남아는 오랫동안 자국 남부의 변경으로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주요 관심대상 지역이었다. 중국은 영국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미국과 태국·필리핀의 군사동맹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즉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ASEAN과 더불어 자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영향력 팽창저지가 이시기의

최대 과제였다. 이를 위해 1950년 2월 소련과 동맹을 맺었고 같은 해에 버마(미얀마)·인도네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제 3세계와의 제휴를 통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려 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국은 1956-1969년간 버마(미얀마) 2,700만불, 인도네시아 1억 500만불, 캄보디아에 9,200만불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면서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3]. 한편으로 중국은 ASEAN을 SEATO의 제판으로 보고 반대하면서 각국의 화교와 공산 반정부 세력 지원을 통해 ASEAN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당시 ASEAN 각국들은 중국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자국내 공산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1960년대 반정부 공산세력 규모는 미얀마 5,000명, 인도네시아 15만명, 말레이시아 2,000명, 필리핀 1,750명, 태국 1,45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4].

1970년대에 중국은 미국보다 소련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국과는 화해전략을 구사하면서 소련을 견제하였다. 이 시기에 소련은 동남아 지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침투하여 위성국가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중국은 소련과 국경분쟁, 이념분쟁 이어서 베트남을 근거지로 한 소련의 침투의지를 막아야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동남아에 지향하는 정책목표는 동남아 국가들이 강대국들과 결탁하거나 외교적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 ASEAN 국가들의 비동맹 외교노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ASEAN 국가들에게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5].

19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공격하자 중국은 베트남을 공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ASEAN기구에 속한 국가들이 이탈하여 소련의 이념을 표방하거나 추종하거나 나아가서 소련의 군사력을 주둔하게 하는 것은 안보위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소련의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ZOPFAN[6] 선언을 지지하였고 소련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ASEAN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합전선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1974년 말레이시아와 국교를 수교할 때 말레이시아 국내 공산당의 활동은 중국과 무관한 것이라고 천명하였고 이어서 필리핀과 태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들어 중국은 자국의 주변부 국가들인 베트남, 버마(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을 지원함으로써 동남아 진출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였다[7].

중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하고 적대관계에 있었다. 남사군도 갈등,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중국의 견제, 중국과 베트남의 1979년 전쟁 등으로 상호 외면하는 외교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베트남이 1986년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구하자 중국과 유사한 공산체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의 지도부를 지원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했다. 미얀마와는 1988년 군정을 연장한 군부세력과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는데 이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을 때였다. 미얀마 안다만 해역 이용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진출로를 확보했다. 라오스와는 1988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완성하였다. 이전에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ASEAN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중국은 태국 등 ASEAN 지역 국가에 대항하는 공산주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1985년 7월 양국 간의 교역이 다시 이루어지고 1989년 2월 양국간 외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태국에는 1986년이후 전차, 장갑차, 군함 등을 수출하는등 태국의 최대 무기공급국으로 부상하였다. 싱가포르와 중국은 1985년 11월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고,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경제관련 협정이 1986년 4월 체결되었다. 1950년대에는 중국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소련과 연합정책을 추진했고 1960년대에는 소련과 미국을 동시에 멀리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8].

3. 중국의 대 아시아정책

탈냉전 이후 중국의 외교적 위기상태가 여러 번 있었지만 천안문사태를 시작으로 중국의 개방정책과 동시에 동남아에 대한 외교정책을 재정리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 1980년대 이후 소련 붕괴 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② 중국의 경제능력

확대를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시장, 기술, 자본, 경영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③ 인도양에 대한 접근 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④ 남태평양 일대 특히 남중국해의 에너지 개발, ⑤ 민주주의 정치의 다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서방세력에 대한 대응, ⑥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지하는 것 등이다.

즉, 중국은 경제협력 파트너 필요, 역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 저지, 서방의 인권비난 공동대처 등의 필요에서 ASEAN 국가들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인접국가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산 게릴라 활동지원과 같은 공격적인 외교를 지양하고 실질적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활동에 주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ASEAN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도모하면서 1990년 12월 ASEAN 각국 공산당에 대한 지원중단을 천명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등 국가들과 연이어 국교 정상화를 이룩하였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1994년 ASEAN 국가들의 주도로 출범한 ARF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ASEAN 국가들이 추진하던 EAEC 구상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일관된 지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하였다[9].

최근까지 일본이 장기간 접근하였던 주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중국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1997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기 태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에 금융지원과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 등을 시행하였고 중국의 경제 및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 외에도 ASEAN 국가중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이 합자하여 진행하던 메콩가유역 유역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외교 및 군사 협력에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는데 ASEAN+한·중·일 협력체제에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이 2000년대들어 대테러 전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의 전략적 입지가 높아지자 중국은 경제분야에서 FTA 체결합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중국의 영유권 확보와 문제해결을 위해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함으로써 적극적인 동참과 접근을 하였다.

경제분야에서 2000년 주룽지 총리가 ASEAN과의

FTA를 전격 제의한데 이어 2002년 11월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데 이어 2004년 11월 FTA를 체결함으로써 인구 17억명, 교역액 1조 2,000억불에 달하는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공식화하였다. 이 협정은 중국과 ASEAN 6개 선발국들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가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완료키로 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 후발국들과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에 합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10].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대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이 주변 국가와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10일(2007. 9. 10)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나투나 제도 북쪽 지역은 인도네시아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한 수역이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영역이 겹친다”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 지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위협 사격을 가하는 등 세 차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NYT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의 대립을 피해오던 인도네시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0년동안 자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충돌을 피해왔다. 그러나 나투나 제도가 어획량이 많고,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 매장량이 상당해 이 지역만큼은 인도네시아가 포기할 수 없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11].

중국의 ASEAN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강화는 2001년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전략적 우위 확보, 중국 국력의 한계, 다수 ASEAN 국가들의 뿌리깊은 대중국 위협 인식,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 안보동맹 등 현실적 제약조건들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ASEAN 국가들의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해 주는 변수가 되고 있다[12].

4. 대응방안

중국의 전략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잠재

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의 군사동맹 약화시키고 미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인도양 지역과 말라카해협을 중국 자체 해군력으로 제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둘째, 인도에 대한 견제력을 늘리기 위해 주변국가 특히,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며 동시에 중앙아시아와 몽골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구할 것이다. 셋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이를 통하여 중국의 위상강화와 경제적 우위달성에 노력할 것이다.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 핵도미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다. 한·일이 핵무장을 할 경우 우선 미국의 핵우산 밖에서 독자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는 선택을 미국이 동조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동남아·중동으로 핵도미노가 번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에서 핵비확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 리 없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13].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미·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참고문헌

[1] 이호재, 『약소국 외교정책론』 (서울: 법문사, 1978), pp.3-6.
 [2] 국민일보, 2017년 9월 12일자
 [3] 김국진, 『동남아 국제정치론』 (서울: 정음사, 1985), pp.198-199.

[4] 김국진, 앞의책, pp.184-186.
 [5] 김국진, 앞의책, pp.172-208.
 [6] The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197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SEAN정상들이 발표한 선언
 [7] Stephen B. Young, "China Holds the Indochina Ke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6, 2002, p. 24.
 [8] 박재규, 『전환기의 동남아세아』 (앞의책), pp.75-77.
 [9] 양승윤·황규희외, 『동남아-중국관계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2003),pp.203-209.
 [10] 동아일보, 2014.12.1일자
 [11] 조선일보, 2017년 9월 12일자
 [12] 배궁찬, "신정부의 대ASEAN 정책방향: 동아시아협력을 중심으로,"(서울:외교안보연구원, 2002), pp.1-14.
 [13] 중앙일보, 2017년 9월 18일자

— [저자소개] —



김 성 우 (Kim, Sung Woo)
 1983년 2월 학사
 2004년 2월 석사
 2011년 8월 박사
 현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tiger@tu.ac.kr